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서라도 남북간의 불통을 풀어야 한다

김 영 희 / 중앙일보 대기자

후퇴하는 남북관계

긴 시야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1972년의 7.4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1994년 성사 직전까지 갔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은 일진일 퇴하는 남북관계의 프로세스에서 다섯 걸음, 열 걸음의 진전으로 보였다. 그러나 진전은 언제나 북한의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상쇄되고 일진은 이퇴에 자리를 양보하고 다섯 걸음, 열 걸음의 진전은 스무 걸음, 서른 걸음의 후퇴에 밀렸다.

그런 남북관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만 거듭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2010년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하나의 변곡점(Inflection point)로 삼아 남북관계를 다시 전진 패턴으로 돌리려고 물밑과 물위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구상을 들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의 시점부터 이미 통일부 폐지론으로 상징되는 대북 강경 자세를 예고했다. 그런 정부가 왜 지금 와서 막힌 남북관계를 뚫겠다는 것인가?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인 업적을 쌓지 못했다. 경제는 수출은 잘 된다는데 일자리는 늘 기미를 안보인다. 잇달아 터지는 권력 주변 사람 들이 관련된 부패, 비리 스캔들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극도고 자극하여 지난 재·보선에서 분당을의 이변을 일으켰다. 여당은 방향과 정체성을 잃고 야당과 포퓰리즘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재벌때리기도 국민들의 분노를 그쪽으로 돌리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라도 시원한 통 큰 돌파구를 찾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앞선 두 정부의 햇볕정책을 실패라고 규탄해도 북한이 2009년 2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기술수준을 높이고 우라늄 농축방식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는데서 오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은근하고 지속적인 압력이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합의 이행이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와 합의 위반에 직면하여 6자회담재개의 절차는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한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핵문제 해결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종식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회담을 하기 위해서 내키지 않는 남북대화에 응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천안함 · 연평도에 대한 사과가 걸림돌이지만 남한은 사과의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는 말로 북한이 받아들일 사과의 수준에 합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북한이 그 방안을 베이징 비밀회담 후에 폭로하여 무력화 시켰지만 사과의 신축성이라는 문은 열려있다. 내년에 중간선거와 대선을 치르는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3차핵실험을 하고, 남한에 군사도발을 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북한과 대화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이해가 합치된다.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그렇게 해서 발리에서 7월 22일 남북한 외무장관들과 핵협상 대표들이 회담을 하고, 25일 정부는 북한에 밀가루 지원 재개를 발표하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협상을 하자고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아래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제1차관)이 7월 26일 뉴욕에 도착했다. 그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스티븐 보



스워스 한반도 대북특사를 비롯한 미국 관리들과 일련의 회담을 가진다. 그들의 회담은 남북대화 재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뉴욕의 북미접촉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기다리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어버렸다. 그것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여 북한 비핵화의 기회를 살려보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은 싫든 좋든 미국에 끌려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걸을 수밖에 없다. 북한도 같은 처지다. 이런 사태의 반전에는 미국과 중국간의 교감이 적지 않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진일퇴의 패턴을 보이는 남북관계는 다시 진전의 패턴으로 돌아섰다. 한국과 미국의 두 정부에게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가시권에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북 한 역시 내년에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큰 잔치를 치러야하 고. 동시에 3대세습체제의 기초를 놓으려면 국민들을 기아선상에서 구제하는데 필요한 최소하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천안함연평 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고 개성과 금강산 사업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남한은 북한의 곳간을 채우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프로세스로 핵문제 해결이라는 최종 목표가 달성되면 미국은 2009년 북한의 핵실험 때 시작한 경제제재를 풀고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 한 지원을 재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럽공동체(EU)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미 국 눈치 안 보고 북한과의 거래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어디까지나 북 한이 진정성을 보인다고 서울과 워싱턴이 판단할 때나 실현될 수 있다. 힐러리 클 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으면 목적의 진지성(Seriousness of purpose)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사절한다는 의미다. 진 정성을 요구하기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

발리에서 시동이 걸린 남북대화 모드(Mode)가 생산적인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간 긴장 완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이번 남북회담과 북미회담도 두 걸음 후퇴에 앞선 한 걸음 전진일 수도 있다. 북한이 비핵화나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이른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남북북미대

화가 의미 있는 진전 궤도를 타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전략적 인내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無爲)의 정책 으로는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는데 있다.

비판론자들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화를 재개하고, 밀가루를 지원하고, 금강산의 문을 다시 열어봐야 한번 샀던 말(馬)을 두 번, 세 번 사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불평한다. 그들은 임기 말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련 때문에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위정책의 종말을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남한이 개성과 금강산에서 북한으로 가는 돈줄을 막아도 북한은 잘 버틴다. 북한이 생명줄이나 이어가는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남북한과 북미간의 불통(不通) 상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은 두 가지 길을 걸을 것이다.

하나는 핵실험을 다시하고, 작년에 그 존재를 세상에 공개한 우라늄 농축(UEP)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본격적인 핵무기 보유에 나설 것이다. 북한이 걸을 또 하나의 길은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핵물질의 대외 수출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단두는 대개 6개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핵단두들은 소형화와 경량화가 덜 진행되어,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여 실전 배치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도 아직은 숨돌릴 틈을 갖는 것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언제까지나 지금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요, 중대한 착각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파 참모들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낙관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강화와 미사일 기술의 업그레이드 여지를 외면하는데서 오는 오산이 아니면 희망사항일 뿐이다. 북한이 플루토늄 방식과 우라늄 농축을 풀가동하여 핵단두를 10개이상으로 늘리고 그것들을 탑재할 미사일 기술을 몇 단계 높인다면 앞으로 진행될 남북간의 모든 협상에서 북한이 압도적이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북한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북한의 핵물질과 미사일 수출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무기 수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거미줄 같은 봉쇄망을 쳐도 넓은 하늘길과 뱃길을 다 차단할 수는 없다. 북한이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된 미국이



"핵문제 해결"의 정의를 완전 비핵화에서 핵물질 수출 방지로 후퇴시킬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현저하게 갈리지만 북한 비핵화를 주도할 효과적인 지렛대를 갖지 않은 한국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의 미국의 입장 후퇴를 견제할 수단도 없다. 핵협상의 어느 단계에 이르면 무엇을 가지고 핵문제 해결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간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은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게도 우럭도 다 놓치고 만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

한국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가? 샀던 말을 다시 사는 각오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 그래서 발리 회담과 밀가루 지원 재개와 금강산 사업정상화 논의를 위한 회담 제의를 환영하면서 그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간 현저한 국력차를 자랑한다. 실제로 경제를 포함한 국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남북한의 게임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약자가 더 극악스럽다. 약점이 있을수록 허세를 부린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여 남한을 최대한 압박하려 든다. 그러나 천안함 · 연평도를 겪은 남한은 그런 전력의 비대칭문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북한이 자멸을 각오하지 않은 한전쟁도발은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우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때 통일을 포함한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환상에 젖은 적이 있다. 핵 문제는 북한 문제의 일부다. 북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일부다. 한반도 문제는 4강의 이해가 마주치는 동북아시아의 틀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큰 틀 안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의 한 요소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의 매커니즘과 한미·한중 공조가 필요불가결한 이유다. 천안함 직후에 나온 5.24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하고,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유연하게 풀어 남북·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주도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할 일이다. **22**